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행정중심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세대만의!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9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0월 16일 (음력 9월 18일) 목요일

쌀 직불금 줄줄 샌다

'부당 수령' 광주 334건·전남 665건 적발

개인 간 계약 … 단속 사실상 불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이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금은 실질 경작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비농업인인 단순 농지 소유자에게도 일부 부당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광주에서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25% 가량이 전남 등 타 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광주시와 농식품부가 15일 광산구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날 광주시·전남도,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도 직불금으로 1만4천294농가에 57억6천만원을, 도는 17만6천584농가에 1천361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의 경우 농지소유주와 실제 경작농민이 직불금을 이중으로 수령한 경우가 전남에서는 825건, 광주에서는 1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쌀직불금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직불금 부당수령을 적발한 사례도 각각 334건(2천 만원), 665건(2천148만7천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농지 전용, 농지면적 부풀리기, 중복수령 등을 통해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 2006년 직불금을 수령한 전체 농가 1만4천294명의 22%에 달하는 3천170농가가 전남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7년에도 1만6천350명의 24.9%인 4천80농가가 전남에 농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전남 농지도 3천304ha에 달한다.

전남도도 전체 쌀 재배농지 18만9천381ha 가운데 60%인 11만3천650ha가 임대로 경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부당지원액수는 10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불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원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불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불금 수령농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2중 계약 등을 적발해낼 방법이 없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부당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임대농은 앞으로도 농지를 임대·경작해야 하는 만큼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가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불금이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에게 돌아가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는 있지만 개인 간 계약의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직불제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치는 문화다" '2008 광주김치축제'가 15일 광주시립민속 박물관에서 개막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2008 사랑의 나눔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과 자원봉사자들이 김치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관련기사 9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위공직자 3명 쌀 직불금 수령

정부 조사 착수…내년부터 경작자에만 지급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명을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 파악 및 적법성 여부 검증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정부 고위공무원단 1천500여명 중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국무위원급 이상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직불금 신청 사례가 일단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농식품부 등 전 기관이 달라붙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선(先) 정부 조사, 후(後)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실경작자만 직불금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 강화'와 ▲ 일정액 이상 농업외소득자 지급 제한핵심 변경 ▲ 지급면적 상한 설정 ▲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 부당신청 제재 강화 등 5가지 다.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는다.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 상한 기준은 3천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서 '개인 10ha, 법인 50ha'를 상한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 4:1 UAE 격파

광주·전남 선도기업협회 출범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회장 김보곤·지케이산업 대표)가 15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선도기업협회는 중소기업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전국 최초의 조직으로, 회원사는 물론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겨냥해 신기술 공동개발과 협동화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특히 선도기업협회는 전기전자·조선·자동차 등 10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후발기업 성장·육성 등에 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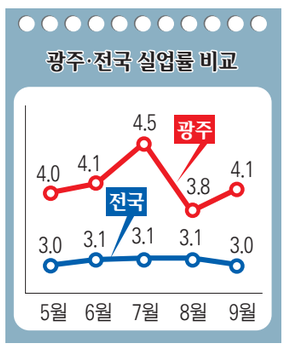
초대 회장에 선임된 김보곤 대표는 "전국에서 영세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실정을 고려, 선도기업협회가 회원사 모두를 우량기업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 '실업률 1위 도시' 불명예

불황에 인력 감축 고용 침체 가속화

지난달 광주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4번에 걸쳐 실업률 1위 도시가 됐다.



특히 광주는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천명이나 줄어든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불황으로 인한 고용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4.0%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광주는 또 지난 5~7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실업률 최고에 올랐다.

광주의 실업률 급등은 장기 불황 속에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지역 산업계가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고용시장 침체는 경제인구 변화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62만7천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63만3천명)에 비해 6천명이나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8천명이나 감소한 것을 비롯,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도 각각 6천명, 5천명 급감했다.

그나마 지난달 개인 사업자가 2만3천명 늘어 취업자 감소폭을 줄였을 뿐 전 업종에 걸쳐 고용환경이 악화됐다. 경기침체와 시장 불안으로 인해 지역 고용시장의 주축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크게 늘었다. 지난달 광주에서 가사,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1천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만4천명 증가한 것으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예비 취업자 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지난달 실업자가 1만6천명에 달하면서 1년새 2천명 늘어나는 등 고용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는 2천373만4천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1만2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8만명)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